

### Ⅲ. 주요 경제 현안

#### 1. 정부의 경기진작 대책 평가

- (정책 방향의 선회) 정부가 경기진작 대책을 발표한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구조조정 우선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 진행쪽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주요 내용)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정지출의 확대, 소비자 금융 확대, 시설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통화공급을 늘려서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
- (보완 과제) 이번 경기진작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 관련 세율의 인하,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청사진 제시, 투자 관련 행정 규제 완화, 재정지출 추가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 경제정책 방향의 선회

- (개요) 정부는 9월 2일 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기진작책을 내놓음. 이는 경제정책 방향이 종래 '先 구조조정 後 경기부양'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동시 진행'쪽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배경) 정부는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러나 최근 성장률, 생산, 소비,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가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더 이상 실물경제의 붕괴를 방치하면 구조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마저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이 정책 방향의 선회를 가져온 배경임
- (의미) 이번 경기진작책은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및 팽창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지속돼온 고금리·긴축정책의 탈피를 의미

#### □ 주요 내용

- (경제불확실성 제거) 신용경색 및 기업 투자 부진의 근본 원인인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
  - 9월말까지 1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 올해 안에 50조 원 규모의 금융구조조정 공채를 모두 발행하고, 이 중 16조 원

- 을 은행 증자에 지원해 6대 시중은행의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줌으로써 은행의 대출 기능 회복
- 워크아웃의 적극 추진과 함께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재정 지출 확대)** 12조 5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실직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 중고시설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 시설재에 대한 투자세액도 공제
- **(통화공급 확대)** 본원통화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유도
  - 총액대출한도를 7조 6천억 원으로 2조 원 늘려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만큼 자금을 공급해주고 대출 금리도 5%에서 3%로 인하
  -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 수준 25조 4천억 원에서 여유분 6조 6천억 원을 3/4분기 신축적으로 방출해 금리 인하 유도
- **(경기진작)**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금융을 확대하고, 1단계 기업구조조정 완료 후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 강화
  - 소비 관련 세율 인하 문제는 검토 중

**<경기 진작 종합 대책>**

구분	내용	비고
경제 불확실성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 비율 조기 달성 지원</li> </ul> </li> <li>○ 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조기 매입</li> <li>○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추진</li> <li>○ 구조조정자금(1.6조원)으로 정상기업 지원</li> <li>○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투자 해소</li> </ul>	9월 말  계속 연말 9월부터 계속
재정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경예산(12.5조원)의 조속한 집행</li> <li>○ 99년 예산도 적자편성</li> <li>○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시설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li> </ul> </li> </ul>	9월 중  9월 중
팽창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 총액대출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조원 증액 및 재할인 금리 인하(5%→3%)</li> </ul> </li> <li>○ 본원통화 여유분(6.6조)의 탄력적 공급</li> <li>○ 중소기업·수출·주택 등 취약부문 자금 지원</li> </ul>	9.1  9월 중 9월 중
경기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의 확대</li> <li>○ 구조조정 완료후 기업설비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수출입은행의 차관 20억 달러 활용</li> </ul> </li> </ul>	9월중 10월 이후

## □ 보완 과제

- **(소비 진작책 미약)** 소비 촉진 없이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금융의 확대만을 내세운 이번 경기진작 대책은 극도로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임
  - 소비 촉진이 이루어져야 '생산 증대 → 투자 활성화 → 성장잠재력 회복'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함
  -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유력한 소비 촉진 수단인 소비 관련 세율(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인하가 빠졌음
  - 일본도 내수부양을 위해서 4조 엔에 달하는 감세 조치를 단행하였고, 추가로 6조 엔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MF도 3/4분기 정책 협의 때 부가가치세율의 1~2% 인하를 촉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조만간 단행되어야 할 것임
-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책 의지의 강화 필요)** 신용경색 및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이번 대책에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9월말까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구체적 방법 제시는 없음
  -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통화를 풀어도 실물 부문으로 가지 않고 금융권내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높고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를 유도할 수 없음
  - 정부는 1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 마무리 및 그 이후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자세를 대내외에 확인시킬 필요성이 높음
- **(투자 관련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필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투자를 막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임
- **(재정지출 대폭 확대)**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은 정부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확대하는 것임. 현재 정부대책에는 지난 추경안에 반영된 재정지출 확대를 제외하고는 추가적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임

(박 흥 진 [hjpark@hri.co.kr](mailto:hjpark@hri.co.kr), ☎724-4032)